

# 尹, 글로벌 기여국 '위상 강화'...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

유엔총회 참석 18~22일 뉴욕 방문  
기조연설 통해 북·러 메시지도 낼듯  
신 인공지능 디지털 질서 정립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22일  
까지 유엔(UN)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  
방길에서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비롯해  
최소 30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뉴  
욕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계기로 미국에  
도착하는 18일(현지시간)부터 북마케  
도니아·산마리노·세인트루시아·모리타  
니아 등 최소 30여개국과 양자회담을  
통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  
지와 관심을 당부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취임 후 58개  
국과 49차례 양자회담을 실시했는데,  
이번 유엔총회 참석으로 그 숫자는 크  
게 늘어날 전망"이라며 "수교 이후 첫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유엔(UN)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길에서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비롯해 최소 30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통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지난해 9월 18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순방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환송인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양자회담을 추진하는 나라도 10여개 있  
고, 일부 국가들은 그룹으로도 만나 부  
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지역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  
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일시 확정된 양자회담  
일정은 30개 정도이며 다수 국가와 회  
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예정"이라며 "이는 과거 해  
외순방 중 역대 어느 대통령도 시도해  
보지 않은 총력외교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19일 대한민  
국의 서아프리카 핵심 협력 대상국인  
가나 대통령 부부와 오찬을 갖는다.

같은 날 오후에 윤 대통령은 안토니

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과 면담을 통  
해 한국-유엔 간 협력방안, 우크라이나  
문제를 포함한 국제현안, 북핵 문제 공  
조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날도 윤 대통령은 공백 시간을 활  
용해 콜롬비아, 모나코 등의 나라와 양  
자회담을 진행하고, 저녁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  
부가 주최하는 리셉션에 김 여사와 함  
께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순방 셋째 날인 20일 유  
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번 유엔  
총회 주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으로,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을  
밝히고 2024~25년도 임기의 유엔안전  
보장이사회(안보리)비상임이사국으로  
서 활동 계획과 의지를 천명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북러 회담'에 대한 메시지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는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  
번 북러 간 군사교류에 대한 적절한 분  
석과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며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 동맹 우  
방국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개별조치,  
함께 취할 수 있는 다자간 조치 등에 대

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지난해 유엔  
총회 참석 계기에 발표한 '뉴욕구상' 1  
주년을 맞이해 뉴욕대에서 개최되는 디  
지탈 비전 포럼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  
서의 기본 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의  
발표 계획을 알리고,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구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  
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파라  
과이 대통령 부부와 오찬을 갖고 저녁  
에는 카리브공동시장(카리콤) 국가들  
과 만찬을 진행한다.

순방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태평양  
도서 지역 정상 및 태평양 도서국 포럼  
사무총장과 오찬을 통해 지난 5월 태평  
양도서국 정상회의를 통해 마련된 정상  
간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협력 모멘텀을 확보해나간다.

김 차장은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 의  
의와 기대 성과와 관련 "크게 글로벌 기  
여 국가로서의 위상 강화,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 전개, 신 AI(인공지능) 디  
지탈 질서 논의 주도로 요약된다"고 설  
명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 민주당 "이종섭 장관 탄핵 최고위서 결정"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열어  
안보에 대한 불안 고려 의견  
추진 여부 고려할 사항 많아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해병대 채 상  
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중심에  
서 있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  
핵안 발의 결정을 15일 최고위원회의에  
서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  
련 보완 입법, 수사 당국의 언론사 압수  
수색 등 현안을 논의했는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은 당론 결정을 하지 못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  
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  
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관련한)  
토론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국방부  
장관의 탄핵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  
다. 내일 최고위에서 논의하고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 탄핵에 대한 당내 이견  
이 있다.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박광온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일치된 의견이지만 장관이 사의를 표명  
한 상태이고 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  
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  
명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했  
고,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안보 공백을 이

유로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  
다. 신 의원의 인사청문회까지 시간이  
아직 남아 있고 의석수 과반 이상을 점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안 발  
의와 처리는 가능한 상황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 국  
방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탄핵이 가능하지만, 실제  
추진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말  
했다.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처  
리되면, 현재의 탄핵심판을 받게 된다.  
최종 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관의  
사퇴 및 교체 불가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장관의 탄핵  
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자 "해임, 탄핵,  
특검, 이런 것이 거대 야당 민주당의 전  
매특허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은 10·29 이태원 참사에서 시민의 안  
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들어  
주무부처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바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박태홍 기자

## 대통령실 "러, 우크라전서 北 제공 무기 사용"

韓, 기조 변경 가능성에 부정적 입장

대통령실이 14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북한이 제공한 무기의 종류가 러  
시아에 사용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쓰  
여졌다는 건 매우 오래 전부터 저희가  
확인해온 사항"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대  
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로켓

탄이 러시아에 공급되고 있다'라는 질  
문에 "정보 사항이라 말하기엔 좀 그렇  
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이 고위관계자는 전날(13일) 김  
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  
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  
는다'는 한국의 기조가 변경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우크라이  
나에 안보·인도·재건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한국과 양자 관계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전황과정  
에서 우크라이나에 도움되는 지원이 무  
엇인지 심사숙고해 나온 1차적 패키지"  
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주변 세력들이 어떤 행  
동을 한다고 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한  
국 입장이 돌변해서 우리의 원칙과 접  
근점이 바뀌는 것도 정상은 아닐 것"이  
라고 선을 그었다. /\*박정익 기자

## 진보 정당 "거대야당 주도의 정치 퇴행"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비판  
야4당 당 대표-의원단 공동 기자회견

진보 정당들이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되돌리려  
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이를 '거대야당  
주도의 정치 퇴행'이라고 규탄했다.

야4당(정의당·진보당·녹색당·노동  
당)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선거법 개악 저지! 야4당  
당 대표-의원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야당이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비례  
성 강화의 원칙을 깨고,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를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2 협  
의체(원내수석부대표+정치개혁특별위  
원회 간사)'를 통해 선거제 개혁 협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  
으로 알려져 22대 총선에서 당선을 노  
리는 진보 정당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  
이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3~6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비례대표제  
선거를 하는 것으로, 실시되면 전국을  
권역으로 하는 비례대표제보다 소수 정  
당의 원내 진입이 어려워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4당은 전날(13일)부터 병립형비례  
대표제 환원에 반대하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함께 권역별 병립형비례대표  
제 회귀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  
에서 "거대 야당이 똘똘 뭉쳐 다시 한번  
선거제 개혁의 열망을 좌초시키려 한  
다"며 "겉으로는 '내전적 정쟁 끝내겠다'  
외치면서 뒤로는 이전보다 한참 후  
퇴한 권역별 병립 비례대표제를 들고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의 의원총회 결  
과를 듣겠다는 야4당 국회의원 및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태홍 기자

오히려 양당의 극단 대결을 부추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혁이 필요할 때, 국회 안  
밀실에 숨어 서로에게만 이익이 될 개  
약안을 내세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당의 관계야말로 '적대적 공생관계' 그  
자체"라며 "민주당은 위성 정당 핑계대  
지 말라.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외치던  
민주당의 결의는 어디로 갔나"라고 반  
문했다.

야4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는 로텐더홀 앞 복  
도에서 민주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  
다. 이후,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시작될  
때 쯤 의총장 앞으로 이동해 피켓 시위  
를 시작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의  
원총회를 시작하려고 하니 양해를 부탁  
했으나, 야4당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시위를  
계속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